

보 도 자 료

배 포 날 짜	2026. 7. 2. (목)			총 4페이지
2026년 7월 2일 충남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 릴레이 성명발표 13				
구 분	보도요청			
수 신	각 언론사 여성·아동 담당			
발 신	성착취(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 전국 네트워크			
담 당	성착취(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 전국 네트워크 십대여성인권센터 서울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통합지원센터 팀장 한다숨 www.teen-up.com / 02) 6348-1318 서울시 은평구 통일로 680 대일빌딩 7층			
릴레이 성명발표 담당	센터명	충남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		총 4장
	담당자	강지선 센터장	연락처	041-548-1388

성 명 서

아동·청소년 성착취 피해 회복은 국가의 책임이다! 국가는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 ‘단 3명의 인력으로 운영되는 현행 사업’ 체제를 중단하고, 인력·예산 확충을 통한 ‘안정적 시설’로 전환하라!
--

◦ 디지털 성착취 피해 선제적 대응 필요

디지털 성착취·성범죄의 수법은 갈수록 교묘해지고 고도화되고 있으며, 피해 아동·청소년의 유입 속도는 견잡을 수 없이 빨라지고 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성매매의 대상이 된 아동·청소년을 자발/강제 구별없이 모두 ‘피해자’로 규정한 지 올해로 6년이 되었다. 국가는 이들을 보호하겠다고 지원 센터를 구축했으나, 현장의 범죄는 선제적으로 방어되지 못한 채 날로 확산되고 있으며, 피해 아동·청소년들은 이미 극심한 트라우마를 입은 상태로 센터에 연계되고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 이들의 무너진 삶을 붙잡아주고 있는 전담 종사자는 고작 3명에 불과하다.

○ 충청남도 천안·아산 ‘AI 특화 시범도시’ 선정 아동·청소년 보호에 앞장설 차례

충남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는 충청남도 15개 시·군 권역 전체를 단 3명의 인력이 전담하고 있다. 충청남도 도내 9세~24세 아동·청소년 인구는 약 314,946명(2026.03.31. 기준)에 달하며, 특히 천안·아산 지역은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으로 젊은 세대의 유입으로 도내 전체 아동·청소년의 약 55%(173,091명)가 밀집해 최대 규모의 인구를 형성하고 있다. 이 지역은 행정안전부 공모 사업을 통해 ‘AI 특화 시범도시’로 선정되어 미래형 도시 혁신까지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인구 밀집, 급격한 도시화, 고도화된 디지털 환경 속에서 아동·청소년을 표적으로 삼는 성착취 위험성 역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외형만 첨단화될 뿐, 그 이면에서 상처받는 아동·청소년들을 위한 사회안전망은 방치되어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첨단 기술의 발전 속도에 발맞추어 디지털 성착취를 선제적으로 방어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시스템 구축에 국가가 더 적극적으로 예산과 관심을 투자해야 한다.

○ 건강한 자아정체성 확립을 위한 장기적 사례관리 필수

피해 아동·청소년들이 마주한 현실은 단지 성범죄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이들은 학교 폭력, 가정폭력, 불법 도박, 약물 오남용 등 복합적인 범죄와 유해 환경에 다중으로 노출되어 있다. 청소년기의 핵심 발달 과업인 건강한 자아정체성 확립과 정서적 안정 및 사회적 독립을 지원하기 위해 성착취 피해로 얻힌 다차원적인 상처를 보듬는 고도의 집중 케어와 장기적인 사례관리가 필수적이다.

○ 종사자의 소진? 피해 아동·청소년의 지원 질 저하 및 단절의 신호 (인력 확충)

그러나 이 모든 사회적 비극의 무게를 지원센터 단 3명의 종사자가 고스란히 감당하고 있다. 아동·청소년들을 긴급하게 지원하고 늦은 시간까지 지원하는 과정에서 현장 종사자들은 극심한 에너지 소진, 즉 ‘번아웃’을 겪고 있으며, 이는 피해자의 고통에 깊이 공감해야 할 종사자들이 도리어 심리적 역전이 위험에 노출되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종사자의 소진은 결국 피해 아동·청소년에 대한 지원의 질 저하와 단절로 직결된다.

◦ 우리는 언제까지 이 범죄의 생태계를 좌시할 것인가

실제 현장의 지표는 이미 엄중한 경고를 보내고 있다. 충남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로 2025년 검·경통지 및 연계 의뢰된 17명의 아동·청소년 중 약 88%(15명)가 랜덤채팅과 SNS 등 디지털 공간 내에서 1차 피해를 입었고, 이는 곧 오프라인 범죄 피해로 이어졌다.

온라인 그루밍, 디지털 성범죄, 성착취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사회적 재난’이다. 하지만 이 재난에 대응하는 국가의 법적·제도적 체계는 여전히 미약하다. 더욱이 아동·청소년을 착취한 성매수자들이 집행유예로 풀려나고, 막대한 수익을 올리는 성매매 알선 집단 또한 범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받지 않고 있는 현실은 우리 사회의 사법 체계가 피해자 보호와 범죄 억제라는 본래의 책무를 다하고 있는지 묻게 된다.

◦ 안정적인 시설 전환 필요

국가는 이 중차대한 책무를 고작 ‘3년 단위’의 한시적인 민간 위탁 공모 사업 형태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 단기적 사업 효율성이라는 잣대를 넘어, 사법 체계의 변화와 함께 ‘피해자 중심의 안정적 지원 시설’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국가는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착취 피해 확산세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센터의 인력과 예산을 전면 확충하라!

피해 대응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촘촘한 밀착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강화해야 한다.

하나, 국가는 아동·청소년의 성착취 피해 대응 및 보호·지원 업무를 단 3명의 종사자에게 전가하는 현재의 사업 체제를 중단하고, 현장 종사자의 고용 안정과 안전한 노동환경을 보장하라!

종사자가 안정적인 환경에서 전문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노동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피해자 지원의 질을 높이는 첫 걸음이다.

하나, 아동·청소년 성착취 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을 중단하고, 성매수자와 알선 집단에 대한 무관용 원칙 및 강력한 실행 선고가 가능하도록 사법 체계를 전면 개선하라!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우고 범죄 생태계를 근본적으로 차단해야 한다.

하나, 아동·청소년들이 학교폭력, 가정폭력, 도박 등 다중 범죄와 유해 환경에 노출되기 전 온·오프라인 성착취를 선제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조기 개입 시스템을 구축하라!

디지털 성착취로 유입되는 경로를 미리 차단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 통합 조기 개입 시스템을 도입하여, 아동·청소년들을 선제적으로 보호해야 한다.

충남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 센터는 상처 입은 우리 아이들이 온전한 자아를 회복하고 안전한 일상으로 돌아오는 그날까지 곁을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이다. 아울러 국가와 지자체가 말뿐인 보호를 넘어 실효성 있는 책임 지원 체계를 확립할 때까지, 성착취(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 센터 전국 네트워크와 단단히 연대하며 멈춤 없이 함께 할 것을 엄중히 선언한다.<끝>

2026. 7. 2.

(사)우리가족 충남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

